<개혁 '98 : 화학경영을 혁신하자!>

석유화학 구조조정은 퇴출로…

Big Deal로 불리우는 Business Swap 아니 Merger 협상이 1차 마무리됐으나, 진정한 의미의 사업교환이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구조조정은 온데간데없고 또다른 대규모 부실을 잉태하는「Evil Merger」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석유화학 부문이 그러하다.

4대 재벌들은 1차 구조조정을 발표하면서 해당기업들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금융권에 대해 대출금의 출자전환 즉,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대출금 일부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출자전환 뒤 기업이 정상화돼 주가가 오르면 보통주로 전환한 후 외국자본 등에 매각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원금은 10년거치 후 일시 상환하고, 금리도 우대금리(Prime Rate) 적용을 요청했다. 금융지원이 없으면 구조조정 노력을 더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부연설명(?)을 덧부치면서…

정부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매각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 자산 인수시 취득세 감면, 채무 승계분 손비산입, 합병에 따른 회계상 이익금에 대한 세금면제를 요구하는 한편, 원자재 수입 및 수출금융 확대, 조정관세 시행, 기업인수 후 자산매각 시 주식 매수청구권 불인정 등의 법적·정책적 지원책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림산업, 호남석유화학 등은 정부가 대출금 출자전환을 요구하는 현대석유화학과 삼성종합화학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은 특정기업에 대한 편파적인 지원이라고 지적, 현대와 삼성이 정부의 구조조정 요구를 빌미로 부채를 떨어내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석유화학 관계자들은 97년말 현대석유화학은 부채가 3조2959억원(부채비율 687%), 삼성종합화학은 2조5171억원(722%)으로 99년말까지 정부가 요구하는 부채비율 200% 이하를 맞추려면 엄청난 자구노력을 해야 하는데, 삼성과 현대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2조원 이상의 부채가 출자로 전환되고 만기 연장된 부채의 상환을 10년 유예하는 것은 부당한 금융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다. 90년대 초 삼성과 현대가 후발주자로 뛰어들면서 공급과잉이 초래됐는데 이제 공급과잉의 원인제공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금융기관들도 부채탕감이나 우대금리 적용, 출자전환 요구 등은 재벌들의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불쾌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출자전환은 무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은행경영을 더욱 부실하게 하며, 부채탕감도 있을 수 없고, 우대금리 적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도 해당기업들이 우량·건실화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채권금융기관의 동의하에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주, 종업원, 투자자,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적정한 손실분담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현대와 삼성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5조8130억원이라는 부채를 짊어지고 회사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국내 1-2위 재벌에 대해 특혜소지가 있는 금융 및 정책적 지원을 한다는 것도 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 신규투자 및 달러화 강세에 따른 외화부채의 원화부채 급증을 인정한다해도 이토록 부채규모가 과다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다. 합병 후의 지분다툼과 경영능력도 문제이다.

따라서 현대와 삼성의 통합을 원활히 하고, 재벌에 대한 특혜지원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그 이후 금융 및 세제,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정책당국자들은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첫째, 현대와 삼성에 대한 실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해 과다한 부채의 원인을 규명하고 둘째,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 또는 지급보증 계열사들이 경영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각각 2조-1조5000억원의 부채를 통합 이전에 해소해야 하며 셋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복설비 및 인력을 과감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영구조 및 경영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외국 전문가를 포함하는 제3의 경영인을 선임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현대와 삼성의 석유화학사업 통합은 현실성이 없고, 「퇴출」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지적해둔다.

<화학저널 1998/9/21>